

# 내일배움카드 장려금 월 20만원으로 인상

###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30조3천억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 신설 디지털 실무인재 3만7천명 양성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3.9% 감소한 30조3,481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의결됐다. 30조3,481억원은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5,131억원, 작년 31조5,809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다가 올해 다소 축소됐다.

다만, 30조3,481억원은 정부안(30조340억원)보다는 1%(3,140억원) 많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000명을 양성하는데 4,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금융,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 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000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

우에는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설됐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작년 127억8,000만원에서 올해 155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규모는 104만4,000만명으로, 작년보다 소폭(1만4,000명) 확대됐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작년 1조5,807억원에서 올해 1조6,964억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농수산식품거래소 직원들이 2009년 거래소 출범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기념해 함께 축하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 ‘3조 8천억’ 농수산식품거래소 역대 최대 실적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등 혁신

### “비대면 유통 선제 대응 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식품거래소가 역대 최대 거래실적인 3조 8,000억원을 달성했다.

농수산식품거래소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농수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됐다.

B2B 기업간 거래를 시작으로 그간 공공급식, 온라인 경매,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거래방식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 9월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범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확대 오픈한 온라인 거래 시스템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처가 온라인으로 식단편성부터 계약과 정산까지 식단을 원스톱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공공급식 영역 전반으로 식재료 거래를 확대, 지난해보다 6,000억원 증가한 3조4,000억원의 공공급식 거래실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 경매 분야에서의 지자체 협업 강화를 통해 양파·마늘 등 비축물자와 송아지

·계란 등 경매 품목을 다양화해 작년보다 116% 증가한 480억원의 경매 실적을 달성했다.

조곡 등 B2B 기업 간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3,520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성과는 코로나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회사가 농수산식품의 비대면 소비유통구조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 확대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힘써 국내 농수산식품 소비가 더욱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올해 지원사업·입찰정보 공개

### 총 126건 330억 규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2일 2023년 지원사업과 입찰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는 62건, 180억원 규모이며 입찰정보 분야는 약150억 규모인 64건이다.

지원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내용과 지원대

상,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입찰정보의 경우 과업기간, 사업예산, 참가 자격, 입찰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겼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각 사업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작년보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관련 기업과 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내고 있다.

탁용성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올해도 지원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중 신규사업 및 변경이 발생한 사업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며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 중소기업계 “전기요금 인상 심각한 우려”

### “합리적 요금체계 개편 필요”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24개월째 상승추세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경제전반에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가파

르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의 이중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의 전문학적 적자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공감한다”며 “한전과 무관한 전력산업기부금 부담금 요율인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업의 피해경감을 위해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먼저 전력산업기부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신설 등을 통해 납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사업과 세제지원을 망라하는 입체적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

### 내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 법전원·의전원생도 지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학기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묶인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5학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로 인상한 여파로 시중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생계비 부담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1.55%포인트,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작년 10월 말 기준 5.34%)보다 3.64%포인트 낮다.

금리 동결에 더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도 늘려 더 많은 학생이 오랜 기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교육부는 기존 대학생,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도

연령, 신용요건 등을 충족하면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기준소득을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상환기준소득이 오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범위는 일반대학원·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높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학부모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등록금 대출의 경우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안내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일 전남본부에서 릴레이 고향사랑기부 동참 캠페인을 펼쳤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전남농협, 고향사랑기부 동참 릴레이 캠페인

### 관내 전 사무소서 수납 대행

### 참여고객 특별우대금리 제공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일 전남본부에서 올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릴레이 고향사랑기부 동참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1일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통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농협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기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국 농협 모든 사무소에서 기부금 수납을 대행한다.

릴레이 고향사랑기부 동참 캠페인은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로 표현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농협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 동참 운동이다.

박종택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살리기의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기부확대를 위해 NH고향사랑기부 예·적금을 출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고객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고, 공익기금을 적립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성진 기자